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목 차>

1.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인상

금융위원회

< 규제의 개요 >

1. 규제사무명	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인상				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홍상준
	담당부서 (과)	서민금융과		직급	행정사무관
	국장	윤창호		연락처	02-2100-2612
	과장	하주식		이메일	hongguqaz@korea.kr
3. 관계법령 · 고시 등	대부업법 제21조, 대부업법 시행령 제8조2 및 [별표3]			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대부업자	대부업자(8,980개),	입법예고	-
	이해관계자	관련협회	대부금융협회	입법예고	-
5. 규제 존속기한	없음(지속추진 필요)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강화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				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구분	법규명			
	법	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			
	시행령	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			
	감독규정	대부업 등 감독규정			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*에 맞추어 정비

*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, 2천만원 한도 → 1천만원, 5천만원 한도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<u>사항</u> 을 고려하여 <u>부과한다</u> . 1. ~ 3. (생략) ② (생략)	제8조의2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① - ----- ----- <u>사항 등</u> ----- <u>부과하</u> <u>거나 감면할 수 있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[별표 3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</u> (제12조 관련)	[별표 3] ----- -----
1. 일반 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. 나. <u>시·도지사</u> 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<u>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<u>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</u>	1. ---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나. <u>시도지사등은</u> ----- ----- <u>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--.</u> 다만, <u>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--.</u>

현행					개정안					
2. 개별 기준					2. -----					
(단위: 만원)					-----					
위반행위	해당 조문	과태료 부과 기준			부과 대상	-----				
		1회	2회	3회 이상		----	----	----	----	
가.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 제2항 제1호	20	100	200	법인	200	400	600		
					법인	50	100	200		
					야간자					
나.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 제2항 제2호	50	250	500	법인	500	750	1000		
					법인	100	250	500		
					야간자					
다. 삭제 <2013.6.11>										
라.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 제1항 제1호	20	100	200	법인	200	400	600		
					법인	50	100	200		
					야간자					
마.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 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 제1항 제1호	50	250	500	법인	500	750	1000		
					법인	100	250	500		
					야간자					
바.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 제1항 제1호	50	250	500	법인	500	750	1000		
					법인	100	250	500		
					야간자					
사.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"대부" 또는 "대부중개"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 제1항 제2호	200	500	1000	법인	600	1000	2000		
					법인	200	500	1000		
					야간자					
아.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	법 제21조 제1항 제3호	200	500	1000	법인	600	1000	2000		
					법인					
					야간자	200	500	1000		
					야간자					

현행					개정안					
자.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4호	50	250	500	자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	법인 법인 아닌자	500 100	750 250	1000 500
차.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4호	50	250	500	차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	법인 법인 아닌자	500 100	750 250	1000 500
카.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5호	50	250	500	카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	법인 법인 아닌자	500 100	750 250	1000 500
타.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5호	200	500	1000	타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	법인 법인 아닌자	600 200	1000 500	2000 1000
파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6호	50	250	500	파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	법인 법인 아닌자	500 100	750 250	1000 500
하.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	법 제21조제1항 제6호의2	50	250	500	하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	법인 법인 아닌자	500 100	750 250	1000 500
거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7호	50	250	500	거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	법인 법인 아닌자	500 100	750 250	1000 500
너.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8호	200	500	1000	너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	법인 법인 아닌자	600 200	1000 500	2000 1000
더.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6호	50	250	500	더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	법인 법인 아닌자	500 100	750 250	1000 500
러.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	법 제21조제1항	500	1000	1500	러. ----- -----	----- -----	법인 법인	1000 500	2000 1000	3000 1500

현행					개정안					
경우	제8호				----	---	야간자			
며.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	법 제21조 제1항 제9호	200	500	1000	며. -----	-----	법인	600	1000	2000
					-----	---	법인	200	500	1000
					-----	---	야간자			
버.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	법 제21조 제1항 제10호	50	250	500	버. -----	-----	법인	500	750	1000
					-----	---	법인	100	250	500
					-----	---	야간자			
서.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2항 제7호	50	250	500	서. -----	-----	법인	600	1000	2000
					-----	제1항	법인	200	500	1000
					-----	제10호	법인			
					-----	의2	야간자			
어.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 제2항 제8호	20	100	200	어. -----	-----	법인	200	400	600
					-----	---	법인	50	100	200
					-----	---	야간자			
저.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	법 제21조 제1항 제11호	500	1000	1500	저. -----	-----	법인	1000	2000	3000
					-----	---	법인	500	1000	1500
					-----	---	야간자			
처.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	법 제21조 제2항 제9호	50	250	500	처. -----	-----	법인	500	750	1000
					-----	---	법인	100	250	500
					-----	---	야간자			
커.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거짓으로 작성하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	법 제21조 제1항 제12호	200	500	1000	커. -----	-----	법인	600	1000	2000
					-----	---	법인	200	500	1000
					-----	---	야간자			
터.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대부중개업 협회는 이와 비슷한 칭을 사용한 자	법 제21조 제2항 제10호	50	250	500	터. -----	-----	법인	500	750	1000
					-----	---	법인	100	250	500
					-----	---	야간자			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☐ 대부업법 개정으로 각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*에 맞추어 정비하고,

*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, 2천만원 한도 → 1천만원, 5천만원 한도

-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

- ☐ (정부개입 필요성)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

*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·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☐ 법 개정(17.10.19일 시행)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*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

* 법 제21조제1항 위반인 경우 2천만원 → 5천만원, 법 제21조제2항 위반인 경우 5백만원 → 1천만원

-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인의 경우 현행 3~10배 수준, 개인 의 경우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

- ☐ 아울러,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

< 타 법령상 과태료 면제규정 >

- **공정거래법 시행령**(§65②) :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,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(과태료)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- * 면제 사유는 공정위 고시(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)에 규정 →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,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오인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
- **예금자보호법 시행령**([별표3]1.다.) : 금융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□ (선택 근거)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「제재개혁」(‘15.9월)*의 일환

* 대부업법 개정(‘17.10.19일 시행)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

- 규제대안은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고 업권간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·형평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
- 행정력 투입 수준 대비 위반행위 억제력 등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의 효과 측면에서도 규제대안이 현행유지안보다 우위

□ 한편,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으로 인해 금융회사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

- 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하는 수준이고
- 과태료 인상 수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감독원	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	특이사항 없음
금융회사 등	시행령 변경예고로 의견 수렴	진행중

3. 기대 효과

☐ “숨방망이 금전제재”가 사라지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

- 대형 금융사고·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“숨방망이 제재”라는 비난이 많았음

⇒ 대부업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~3배 인상함으로써 금전제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

☐ 업권마다 상이한 종류·금액의 금전제재를 통일적으로 개정하여 금융업법간 형평성 제고

-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강화를 통해 대부이용자 피해를 예방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☐ (규제목적)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, 금융회사의 신뢰성,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편익을 제공

☐ (규제수단)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, 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☐ 해당사항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☐ 영국·미국 : 영국은 Financial Penalty,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·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

○ 우리나라는 과태료·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·부과요건·부과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,

○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“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”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

-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*

*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“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”으로 규정

-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*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

* 위반행위 1일당 (1단계) \$7,500 / (2단계) \$37,500 / (3단계) \$1,425,000

-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옴

- '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(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)가 \$1억(1천억원), OCC가 \$3.5천만(3.5백억원), LA City가 \$5천만(5백억원)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- '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\$2억(2천억원), FRB가 \$2억(2천억원), OCC가 \$3억(3천억원)의 민사제재금을, 영국 금융당국은 £ 1.4억(2천억원)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- '11년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캘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\$5천만(5백억원)의 약 2배에 가까운 \$9천만(9백억원)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
□ 독일 · 일본 :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

- 독일은 과태료 · 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, Bußgeld라는 단일 금전 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(최대 100만유로)
-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 · 과징금*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(최대 30억원)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

*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

○ 타법사례

□ 공정거래법 시행령 비교

- 대부업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
- 공정거래법은 허위 공시,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*

* 조사 거부 · 방해 · 기피행위는 법률상 부과한도인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
- 반면, 대부업법은 시행령에서 최대 1.5천만원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음

□ 금융법 사례 분석

- ① 현행 금융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최대 5천만원으로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·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

* '15년 과태료 부과금액: 기관 33.6억원(건당 12백만원), 개인 29.2억원(건당 5백만원)
'16년 과태료 부과금액: 기관 35.6억원(건당 16백만원), 개인 24.5억원(건당 6백만원)

- ⇒ 법인인 자 최대 1억원, 법인이 아닌 자(임직원 등) 최대 5천만원 수준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이 인상되도록 11개 주요 금융법*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개정 추진중

* 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지배구조·여전·저축은행·신협·신용정보·전자금융·대부업법

- ②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상이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업권간 제재 형평을 제고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「제재개혁」('15.9월)의 일환

-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태료 금액도 타기관,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☐ 과태료는 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됨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☐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불과함
 - 또한,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☐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감독원,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(‘15.9월)의 후속조치임
 -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(‘15.12월, ‘16.10월)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(심층인터뷰 등)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·수렴하였음

2. 향후 평가계획

- 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

3. 종합결론

- ☐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을 강화하는 「제재개혁」 정책의 일환으로
 -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